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문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04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27.

발 의 자 : 양문석 · 정태호 · 김현정
민형배 · 진성준 · 오세희
김문수 · 김원이 · 이기현
이광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,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그 직무상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.

그런데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).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1항 중 “알게 된 때”를 “알게 된 경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알게 된 경우”를 “알게 된 경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<u>알게 된 때에는</u>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(이하 “장애인권익옹호기관”이라 한다)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	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----- ----- <u>알게 된 경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<u>알게 된 경우에는</u>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알게 된 경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2. (생략) ③ ~ ⑧ (생략)	1. ~ 2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⑧ (현행과 같음)